

사회

20년전 주정차위반 과태료 내라고?

광주에 사는 김모(52)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 날아온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고지서에 적힌 적발 일자가 무려 20년 전인 '1991년 7월'이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적발 장소에 갔던 기억조차 희미했다. 더욱이 차량은 이미 수년 전 폐차까지 한 상태. 이를 항의한 김씨에게 돌아온 해당 자치단체의 답변은 더욱 가관이었다.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군이 보낸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적발일자가 지난 1991년~2004년으로 최대 20년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부과 누락 책임을 뒤늦게 차량 소유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소멸시효 만료나 차량압류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군은 사진 등 주정차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수십 년 전 담당 공무원의 '수기'로 작성된 기록에만 의존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이전에는 주정차위반 자료를 수기로 작성해 보관했는데, 과거(1991년~2004년) 자료를 최근 전산화하면서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은 사례가 발견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순창군, 광주 운전자에 고지서 발송

운전자 항의에 "시효 지나 안내도 돼"

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순창군이 최대 수십 년이 지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광주 등 전국의 차량 소유주들에게 무더기로 발송,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고지서를 보내면서 소멸시효 만료와 차량압류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들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순창지역에서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광주 등 전국의 차량 소유주 900여명에게 최근 과태료 고지서를 보냈다.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3만~5만원(적발 당시 기준)이다.

이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이전에는 주정차위반 자료를 수기로 작성해 보관했는데, 과거(1991년~2004년) 자료를 최근 전산화하면서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은 사례가 발견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벼 해충 방제 "바쁘다 바빠"

19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 들녘에서 한 농민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이랑곳하지 않고 올 가을 알찬 수확을 꿈꾸며 벼 해충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가짜 어업 허가증 팔아 5억 챙겨

목포해경, 선박 매매업자 등 4명 구속

전국의 어민들에게 가짜 어업 허가증을 팔아 수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은 목포를 비롯해 제주·경남 등 전국 어민을 상대로 위조한 근해어업 허가증을 관 혐의(공문서 위조·사기)로 선박 매매업자 김모(61·부산시)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조선 수리업자와 선주 등 알선책 등과 짜고 전남과 경남 지역 어민 10여

명에게 위조한 어업 허가증을 팔아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 등은 통상 1억~2억원에 거래되는 어업허가증을 '5000만~1억원에 사 주겠다'며 어민들을 유인해 위조한 허가증을 건당 5000만~8000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범 일당에게 속은 피해 어민들은 가짜 허가증을 구입하면서 수천만 원을 일당에게 건넨 데다 위조 허가증으로 조업을 하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목포해경 이영호 지능수사계장은 "허가증 위조 조직이 유통한 가짜 허가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직무 연관 골프 접대 5명

국세청, 인사 조치

국세청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외부인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직원 5명을 인사조치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8361) 김중두



불법 정치 후원금 혐의

오병윤씨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노조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오병윤(54) 민노당 전 사무총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중앙지법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수심 개 기업 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오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일보 7월 19일 6면)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반면,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오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2009년 H제철 등 노조 수십 곳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 4개를 통해 최소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

아내 차 출처 담보 돈빌린 '철없는 남편'

○내 아내의 차를 몰러 출처 담보로 빌려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철없는' 40대 남편이 경찰의 추적 끝에 달미.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오모(44)씨는 지난 7월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자신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아내(34) 소유 배리타스 승용차 1대(3400만원 상당)를 훔쳐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뒤 1200만원을 받아 썼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을 미처 몰랐던 오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든 사실이 통찰났는데, 오씨는 경찰에서 "빛을 갖기 위해 차를 아내에게 맡을 하지 못하고 차를 담보로 제공했다"며 뒤늦은 후회.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강진군청 공무원 음독 중태

청자축제 티켓 5만장 판매대금 2억5천만원 남부 부담 느낀 듯

전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돌연 자살을 시도, 원인과 배경을 둘러싸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새벽 3시20분께 장흥군 장흥읍 건선리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강진군 공무원 최모(44·8급)씨가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최씨의 옆에서는 빈 극약 용기가 놓여 있었다.

모텔 주인은 "전날 오후 홀로 입실한 최씨가 프린트로 전화통을 걸어 '극약을 마신 상태니 119를 불러달라'고 말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장흥의 한 병원을 거쳐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날 오후 6시 현재 위독한 상태다.

강진군 소속 공무원인 최씨는 전날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가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군청을 나서

졌다. 하지만 최씨는 전산을 미뤄오다가 최종적으로 오는 21일까지 판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씨는 최근까지 강진군에서 발행한 '청자축제입장권(이하 입장권·장당 5000원)' 판매대금 정산요구에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음독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최근까지 혼자서 모두 35차례에 걸쳐 총 5만 1800장에 달하는 입장권을 자신이 판매하겠다고 군에서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경우 2억5900만원에 이른다. 군은 공무원들이 티켓을 판매할 경우 장당 40원~50원씩을 인센티브로 준다는 계획이다.

최씨는 총 730여명인 강진군 소속 공무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의 입장권을 가져가 약 2주 전부터 군으로부터 수 차례 대금 정산요구를 받아

왔다. 하지만 최씨는 전산을 미뤄오다가 최종적으로 오는 21일까지 판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씨가 2억5000만원이 넘는 입장권 판매대금을 군에 납부하지 않고 사적으로 썼다가 독약을 받자 고민 끝에 음독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향후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제한적으로 입장권을 나눠준 군의 무책임성을 놓고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최씨가 유독 많은 양의 입장권을 받아가 2~3차례 중간정산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까지 정확한 음독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더 이상의 답변은 힘들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청자축제입장권은

40만~50만장 발행 현금처럼 업소서 사용

강진청자축제입장권은 강진군이 축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축제기간 전에 40만~50만장씩 발행되고 있다.

사전 예매시 장당 5000원에 판매되는 입장권은 축제장 및 강진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 청자판매점 등 총 380여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축제기간이 끝나면 입장권 액면의 3%를 공제한 금액을 입장권 소지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 업소는 매출증대 효과를 본다

군은 지난해 5%를 적용, 수수료 1억원과 지역 상가 매출 증가 등 총 2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대법,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절차 유보

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선 부장판사가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 첫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결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유보해달라는 선 부장 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절차가 형사재판 절차보다 앞서 진행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징계양정 시 재판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위원회가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 제20조 2항은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 부장은 이날 심의에 변호인으로 박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의)를 선임해 함께 출석했으며, 오전 10시에 시작된 심의는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위원회는 절차 정지가 끝나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로 다음 징계 심의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여고생 성추행 혐의 여수해경 경위 직위해제

여수경찰은 19일 길을 가던 여고생의 몸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수해경 경위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밤 10시 30분께 여수시 모 고교 인근 길에서 하교하던 B양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순찰 중 B양과 어머니의 고향을 들은 여수경찰서 전경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동료와 술을 마신 후 귀가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사 중인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몸이 스쳤지만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수해경은 A씨를 일단 직위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Large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recruitment information for public service exams (공무원 시험준비) and various exam preparation courses. The ad includes the slogan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The successful senior says!) and lists various exam types like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 and others. It also mentions a special exam on July 23rd and a social welfare exam on August 1st.